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사회복지 실천과 자기결정권

학 번 : 2018050 정수현, 2018036 이동영, 2218024 박은주, 2018014 김현철

# 목차

1

## 서론

- 자기결정권의 정의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 자기결정권의 제한
-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2

## 본론

- 노인 디지털 격차와 자기결정권
  - 디지털 격차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와 원인
  - 디지털 격차의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 청소년 자기결정권
  -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 학생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3

## 결론

-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 서론

- 자기결정권의 정의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 자기결정권의 제한
-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 자기결정권의 정의

자기결정권은 가장 본질적이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포괄적인 권리이며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한다.



자신의 사적인 일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피임, 중절 등의 아이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에  
관한 사항



생명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 연명거부, 존엄사,  
장기이식 등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정의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원칙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것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 윤리강령

### 한국의 윤리강령 II-1-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측 가능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행동이나 잠재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 리머(Reamer, 1995)의 여섯 가지 윤리 지침

여섯 가지 윤리 지침 중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라고 윤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자기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클라이언트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 기준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

## 사회복지사의 의무

-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모든 사항들을 알려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유롭고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
-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에 한계가 있을 때조차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제한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여지가 있는가를 모색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생명 가치가 같은 더 중요한 우선 가치에 의해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자기결정권의 제한

## 온정주의 정의

온정주의(paternalism)는 가족주의, 가부장주의로도 번역되어 사용된다.

여성학에서는 남녀 성역할과 권력관계를 논하는 데서 주로 '가부장주의'로 사용하고,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철학 등에서는 두 단어가 혼용되지만 합의된 정의가 없다.

학문 분과별로 논의 목적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회일반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석된 개념정의에 의하면, 온정주의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개인이 보다 나아지거나 보호될 수 있다는 동기와 주장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혹은 국가, 교육 및 휴먼서비스기관과 제도, 전문가 등이 하게 되는 간섭(interference)을 지칭한다.

# 온정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의 제한

## 인지 능력의 한계

아동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 사회적 책임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사회의 이익이나 도덕적 기준에 반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적 제한

클라이언트는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회 기관의 정책

사회복지 기관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설정하며,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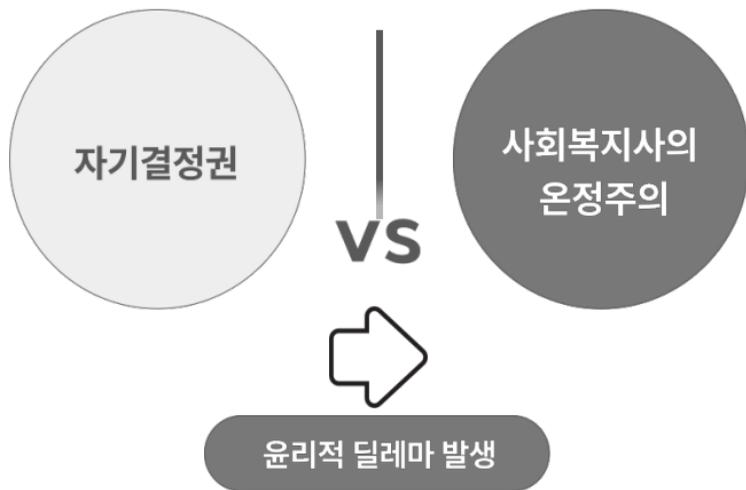
## 의료 권위

의료진의 권위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그 외: 지역 사회의 기준

지역 사회의 특성과 기준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위험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자유와 바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같이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제재하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받도록 강요해야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정보를 보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온정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 온정주의가 정당화되는 상황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해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믿음.

자기결정의 개념, 고지된 동의의 개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복지에 관해서 정확하고 고지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자주 논의되는 것들이다.

## 온정주의를 허용하는 사회복지사

-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그 자신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본론

- 노인 디지털 격차와 자기결정권
  - 디지털 격차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와 원인
  - 디지털 격차의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 청소년 자기결정권
  -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 청소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 노인 디지털 격차와 자기결정권

# 노인 디지털 격차와 자기결정권

디지털격차와 자기결정권 관련 사례

## 일상생활 키오스크 확대될수록 '노인 자기결정권' 침해당한다

강현수 [•구독](#) [다들기사 보기](#) | 입력 2023.01.16 19:15 | 수정 2023.01.16 21:31 | 댓글 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화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되면서 노인 등 중·장년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중부일보 2022년 12월 29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등 계층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정책연구·컨설팅업체 케이스뎃컨설팅은 연구용역보고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를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연구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장 등 5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병원·은행·식당·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노인 디지털 격차와 자기결정권

## 디지털격차와 자기결정권 관련 사례 2.

### '누르다가 아차차'...키오스크 앞 자존감 떨어지는 노년층

'다니는 가게 키오스크는 배우면 다룰 수 있어. 근데 새로운 점포에서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고요. 몇 번 반복하면 뒤에 서 있는 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66세 남성 송모씨)

'은행 가서 나는 그런 거(송금) 할 줄도 몰라요. 애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뭐 필요해요' 하면 사다 주고 그냥 그래요.'(76세 여성 이모씨)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으로 병원·은행·식당·취미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48명을 심층면접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노인들이 병원, 은행, 식당,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면접자들은 "QR코드로 된 백신패스를 영화관 직원에게 보여주기 어려웠다"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두 번 눌러서 중복 결제된 적이 있다"고 했다.

## 디지털 격차의 정의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階層)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 양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종합)

접근  
(0.2)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0.5)

유무선 정보  
기기 보유  
여부  
(0.5)

역량  
(0.4)

PC 이용 능력  
(0.5)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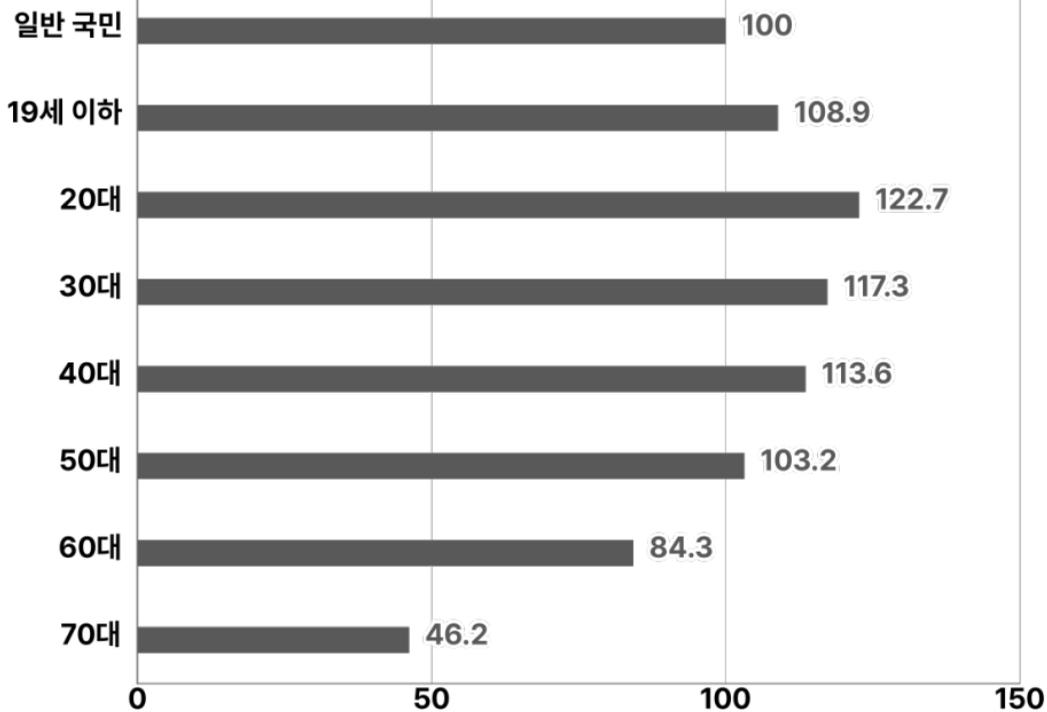
활용  
(0.4)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0.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0.4)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0.2)

#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디지털 격차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와 원인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는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CT기기와 같은 최신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비용의 문제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미함. 이러한 교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디지털 및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지역에 비해 인터넷 서비스가 느리고 제한적인 농촌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인프라로 디지털 격차가 격화됨.
- ICT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트렌드모니터에서 진행한 '현대사회 정보 격차 및 정보 소외 현상' 관련 조사에 따르면 정보 습득 취약 연령층은 60~80대가 압도적으로 높음.
- 비대면 서비스이용 취약 연령층 또한 60~80대가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차지.

## 디지털 격차의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 공공 및 민간 교육의 역할 분리

- 공공과 민간 영역의 역할 분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함.
-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민간 교육 기관을 활용, 공공 지원은 취약 계층에 집중함으로써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기업과의 협력 강화: 장비 및 통신비 지원

-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장비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
- 구형 스마트 폰을 재활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통신비 지원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이 보다 폭 넓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교육 홍보 및 방문 교육 확대

- 교육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인터넷 신청의 어려움으로 교육에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가정 방문 교육을 강화함.
- 소외 계층이 교육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청소년 자기결정권

###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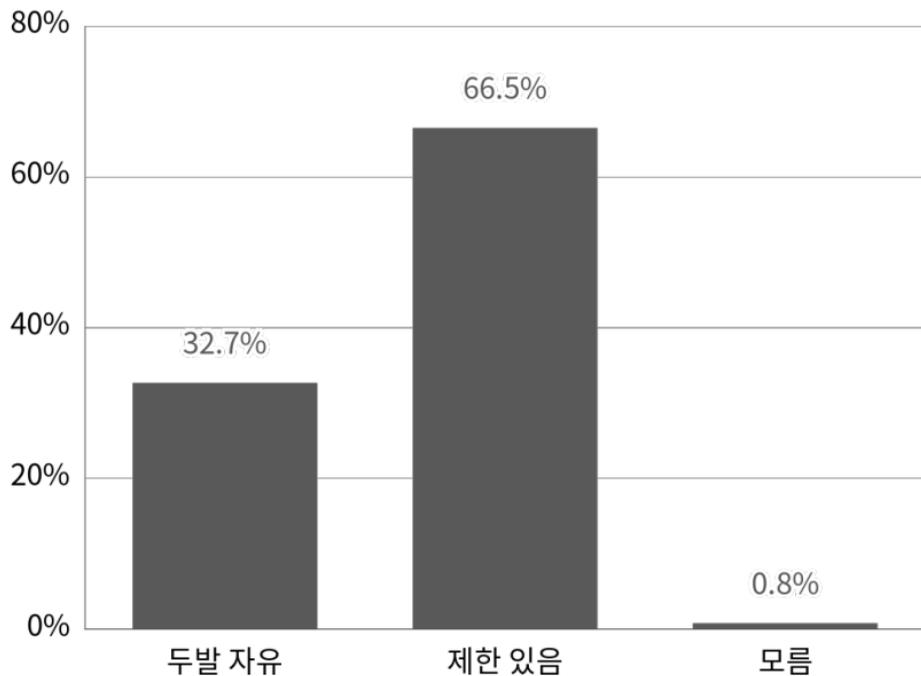
제주도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동절기 교복 위에 외투를 입는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며 제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사례 2

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 사례 3

### 청소년 인권 침해 관련 사례



학교규칙으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교육기본법'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이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의  
향유가 가능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도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도 주체가 다를 뿐 일반적 인권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되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의 권리와 학생 통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원칙



체벌을 제한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함.



학교행정가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생과 교사의  
합리적인 기대를 명시하는  
'학교지침 핸드북'을 개발.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대변자로  
지원하고 행동.

# 학생의 권리와 학생 통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원칙



학급운영에 관하여 교사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체벌과 엄격한 훈육정책을 대신하는 대안을 제안.



서로 소통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



학생인권에 대해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교육에 힘 써야함.

# 청소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옹호자



정책제언가



조사연구자

- 기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통해 생의 대변인이 되어 학생의 이익을 위해 논쟁 및 흥정하고 타협하며 환경 조정.
- 학생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정책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 도움을 주어야함.
-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를 통한 효과적 복지서비스 제공해야함.



'학생'을 단순히 '교육받는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복지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되어야한다.

# 결론

-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지역 사회와 자신의 성격 구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발견 후 원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결정하는 잠재적 힘을 자극하여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

사회복지실천의 자기결정권

관련 영상

<바퀴는 자유다>

Free Wheeling

(에드 로버츠)

---

**Q&A**



## 자기결정권 토론 주제

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장애인 A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그를 돌보는 노부모는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다. 부모는 적극적 치료를 통한 증상 조절이 우선이라며 입원을 원하지만 A는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 담당의사는 현재로서는 위험한 증상이 없으나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부모는 과거 A가 다니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회복지사 L을 찾아가 의논하였다.

-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 위 사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출처

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002580641>
2.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오혜경(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6, / 11
3. 권중돈 외. 사회복지학개론(5판). 학지사
4. 박혜영. (2020).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연구. 法學論文集, 44(1), 39-81.
5.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국가인권위원회
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7. 학교사회복지론 (제 3판). 주석진. 양서원
8.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9. [출처]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은?|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
10.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4831>
1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84560?sid=102>
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1531?sid=102>
1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이효선. 학지사

---



# Thank You!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